

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'2026 집중안전점검' 실시

- 화재·붕괴 등 사고우려시설 31,554개소 대상 집중안전점검(4.20.~6.19.)
-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(4.20.), 기관별 점검 계획 및 위험요인 조치방안 논의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20일(월)부터 6월 19일(금)까지 두 달간 민·관이 함께 참여*하는 '2026 집중안전점검'을 실시한다.

* 중앙·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310개 기관, 민간전문가, 일반국민

○ 정부는 기후변화,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, 화재·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'집중안전점검'을 실시하고 있다.

○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,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,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,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, 보수·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*를 진행하고 있다.

* 현장 조치 4,353개소, 보수·보강 8,582개소(4,456 완료), 정밀안전진단 61개소(24 완료)

< '2025 집중안전점검' 주요 안전조치 사례 >

- ▶ 건물 외벽 배불림 현상을 발견하여 현장통제 및 보수 조치
- ▶ 건설현장 안전보건표지 설치 의무 불이행,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
- ▶ 지역주민이 공동주택 옹벽 균열을 발견·신고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조치

□ 이에,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(월)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*하고,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.

* 참석: 26개 중앙정부(노동부, 국토부, 기후부, 소방청, 산림청 등), 17개 시·도, 11개 공공기관(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수자원공사 등)

○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,315개소가 늘어난 총 31,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.

- 특히, 어린이·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* (16,116개소, 51%)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,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(88개소)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.

* 어린이집, 요양원, 병원, 전통시장, 지하상가, 다중이용업소 등

- 주민이 직접 주변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*한 시설도 빠짐없이 점검한다.

* 주민점검신청제 접수 창구 운영 중(4.1.~)

○ 점검 과정에서는 사람 눈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을 넘어서, 드론, 열화상카메라, 지표투과레이더(GPR) 등 시설에 따라 맞춤형 전문장비를 활용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까지 분석한다.

○ 점검을 통해 보수·보강이 긴급히 필요한 공공시설이 발견되면 재난관리 기금 등을 우선 활용해 조치하고,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.

- 아울러, ‘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’(safewatch.safemap.go.kr)을 통해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,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,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히 살피겠다”라며,

○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	책임자	과 장	박범수 (044-205-4240)
	재난안전점검과	담당자	사무관	강 철 (044-205-4243)

